

주간 통일정세

2015-25

Contents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정치
4. 경제
5.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북한, 인권사무소 개소에 “초강경 대응할 것”(6/23,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23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에 유엔인권사무소라는 ‘유령기구’를 조작해낸 것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감히 도전하는 특대형 정치적 도발행위이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긴장을 격화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는 적대세력들의 무모한 반공화국 인권 모략책동을 단호한 초강경대응으로 끝까지 철저히 짓뭇개버릴 것”이라고 강조함.
 - 대변인은 이어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감히 설치할 엄두를 내지 못한 인권사무소를 서울에 기어코 들여왔힌 것은 북남 대결을 극단으로 끌고 가는 시대착오적인 망동이며 엄중한 도발”이라며 남한 당국을 비난함.
 - 또 북한인권사무소 개설의 근거가 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 대해 “우리는 강압 채택된 인권 결의를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 산물로 즉시에 전면 반대, 배격했으며 그에 따라 조작된 인권사무소라는 것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북한 “인권사무소로 남북관계 파국…말로 할 때 지났다”(6/25,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5일 성명을 내고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이 유엔 북인권사무소라는 화근을 남조선 땅에 끌어들이며 북남관계는 더이상 만회할 수도 수습할 수도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며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조평통은 북한인권사무소 설치에 대해 ‘극악한 특대형 정치적 도발행위’,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악랄한 도전’, ‘끝까지 대결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전 포고’ 등의 표현으로 맹렬히 비난함.
 - 이어 “이제는 말로 할 때는 지나갔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이 시각부터 북남관계에서 초래되는 모든 파국적 후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

폐당이 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함.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북한 “남북관계 파탄 남한 당국의 외세의존 악습 때문”(6/22, 노동신문)
 - 북한은 22일 노동신문을 통해 ‘북남관계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북남관계와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은 북과 남이 합의하고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통해 온 민족 앞에 확약한 민족공동의 통일원칙”이라고 강조함.
 - 북한은 그러나 “현 남조선 집권세력의 친미사대 매국행위는 사상 최악에 이르고 있다”면서 “그들은 민족공조는 외면하고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매달리면서 북남관계의 파국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함.
 - 신문은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북남 관계개선의 분위기가 여러 차례 마련되었다”면서 “하지만 그것이 파탄되게 된 것은 남조선 당국이 외세의존의 악습을 버리지 않고 미국과 함께 민족대결 소동에 광분하였기 때문”이라고 비난함.

- 북한 “우리 민족 자주통일과 핵전쟁 갈림길에 섰다”(6/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외세의 침략책동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지금 우리 민족은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가느냐 아니면 핵전쟁의 참화를 들쓰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한미 합동군사훈련 실시와 ‘맞춤형 억제전략’ 모색,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논의 등을 열거하며 이는 “조선반도 정세를 대결과 긴장의 극단으로 끌어감으로써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려는 술책”이라고 비난함.
 - 또 “지난 조선전쟁은 전조선반도를 지배하고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국의 침략적 야망의 산물이었다”며 미국이 한국전쟁을 도발했고 ‘남침’은 파렴치한 날조라는 왜곡된 주장을 이어감.

- 북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연일 비난…“대가 치를 것”(6/24,우리민족끼리; 6/25, 조선중앙통신)
 - 우리민족끼리는 24일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될 북 인권사무소 설치 책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서울 유엔북한인권사무실 개소를 두고 “공공연한 선전포고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특대형 정치적 도발”이라고 규정함.
 - 또 매체는 ‘인권에 대하여 떠들지 말라’라는 별도의 논평에서 세월호 참사 등을 사례로 지적하며 남한을 “최악의 인권유린지대”라고 반격함.
 -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논평을 통해 “남조선에 유엔 인권사무소가 개설된 것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모독하고 우리의 체제를 부정하는 엄중한 적대행위”라며 “대가를 툭툭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
 - 또 통신은 남한 당국에 대해서 “그 어느 나라에서나 배척받은 유엔 인권사무소를 기어이 서울에 끌어들이는 것은 동족의 사상과 제도에 대한 그들의 병적인 거부감과 골수에 배긴 체제 대결 야망이 극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험담함.

- 북한, ‘자국과 무기거래’ 제3국적자 금융제재 맹비난(6/27, 연합뉴스)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7일 서기국 보도에서 남한 정부가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에 가담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가 독자적인 대북 금융제재를 하는 도발 망동을 부렸다고 “도발자들에게 차례질 것은 무자비한 징벌과 비참한 파멸밖에 없다”고 위협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조평통은 현재 “괴뢰 패당을 무자비하게 초토화할 멸적의 의지를 강철포신들에 만장약하고 고도의 격동상태에 있다”면서 남한에 대해 “동족대결에 광분할수록 처참한 종말의 시각만을 더욱 앞당기게 될 뿐”이라고 거듭 위협함.

- 북한 “인권 소동의 종착점은 전쟁…자멸 가져올 것”(6/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8일 ‘정세파국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제목의 글에서 “반공화국 인권 소동의 종착점은 전쟁”이라고 위협함.
 - 신문은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 등지를 틀게 됨으로써 북남관계는 최악의 파국을 맞게 됐다”며 “도발적인 반공화국 인권 소동이 저들의 비참한 자멸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북, 서해 NLL 일대에 해상부표 설치...의도 분석 중(6/25, 연합뉴스)
 - 군의 한 소식통은 25일 “북한이 지난달부터 서해 NLL 일대에 10여개의 부표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그 의도를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힌 내용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보도함.
 - 북한은 1m 이하 크기의 부표를 백령도와 연평도 북쪽의 NLL 인근에 설치한 것으로 관측됐다고 뉴스는 보도함.

마. 남북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남북 사회 관계

- 북한, 광주U대회 불참...FISU에도 통보(6/22, 6/23, 연합뉴스)
 -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는 “22일 오후 6시46분, 북한이 대회에 불참한다는 메일을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에 보냈으며 이 같은 내용을 FISU로부터 통보받았다”는 내용을 연합뉴스가 보도함.
 - 뉴스는 이메일 내용은 광주U대회 조직위가 받았던 것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한은 앞서 지난 19일 오후 6시31분 조직위 이메일 계정으로 대회 불참을 통보했다고 보도함.
 - 또 뉴스는 북한대학스포츠연맹 전극만 회장 명의의 이 메일에서 이들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사무소 개설을 문제 삼았다고 보도함.

-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서울서 개소...“책임규명기반마련”(6/23, 연합뉴스)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에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의 개소식을 열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북한, 억류 중인 남한 국민 2명에 ‘무기징역’ 선고(6/23,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최고재판소에서 미국과 남조선 괴뢰 패당의 조종 밑에 반공화국 정탐모략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 체포된 괴뢰 정보원 간첩들인 김국기, 최춘길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며 이들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 언도됐다”고 전함.
 - 통신은 이들이 “해외에서 조선의 최고수뇌부 관련 자료와 당, 국가, 군사 비밀, 내부 실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해 국정원에 제공했으며 모략선전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미국과 남조선 괴뢰패당의 국가정치테러, 반공화국 적대행위에 적극 가담한 모든 범죄 사실들을 인정했다”고 주장함.
 - 조선중앙방송은 이들에 대해 “북 인권문제를 꺼들고 위조화폐 제조국, 테러지원국의 모자를 씌워 국제적 고립과 봉쇄를 성사시켜 보려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반공화국 모략책동에 적극 가담했으며 우리 당, 국가, 군사 비밀 자료를 수집하고 부르주아 생활 문화를 우리 내부에 퍼뜨리려 했다”고 강조함.
 - 방송은 이들이 재판에서 북한 형법 제60조 국가전복 음모죄, 제64조 간첩죄, 제65조 파괴암해죄, 제221조 비법국경출입죄로 기소됐다고 밝힘.

- 북한, ‘무기징역형’ 우리 국민 2명 법정 진술장면 공개(6/24, 우리민족끼리TV)
 - 북한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남한 국민 김국기씨와 최춘길씨가 23일 북한 최고재판소 법정에서 최종 진술을 하는 동영상은 24일 우리민족끼리TV를 통해 공개함.
 -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는 우리민족끼리TV가 중국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쿠(優酷)에 올린 2분 51초 분량의 영상에서 한 사람씩 단상 앞으로 나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사죄함.
 - 매체는 영상에서 주머니칼, 여러 대의 휴대전화, 대량의 ‘위조 달러’, ‘손전화·녹음·녹화기능’이 포함된 전자시계, 손목시계형·열쇠고리·단추형 촬영기 등

증거물도 공개함.

■ 북한, 영화 ‘연평해전’ 비난 …“왜곡날조”(6/24,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4일 ‘연평해전’에 대해 “괴뢰극우보수분자들이 저들의 군사적 도발로 초래된 서해 무장충돌사건을 심히 왜곡날조한 불순반동영화, 반공화국 모략영화”라고 험담함.
- 특히 “우리가 공화국 정부 성명으로 북남관계 개선에 대한 공명정대한 입장을 천명한 것과 때를 같이해 이런 광대놀음을 끝끝내 벌여놓으려 하는 것은 통일을 반대하는 괴뢰당국의 흥심을 명백히 드러내 보인 것”이라고 비난함.
- 매체는 제2연평해전이 미국과 남한이 일으킨 계획적인 군사 도발 사건이었다고 주장하고 이어 이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남조선 인민들 속에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불신과 적대, 악의를 뿌리깊이 심어주는 한편 북침전쟁열을 더욱 고취하여 기어코 전쟁을 도발해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임.

- 北「조국통일연구원」, 6월 24일 ‘남한의 노동실태(‘청년실업, 열악한 근로조건·환경, 여성근로자 차별대우 등)’ 비난 ‘백서’ 발표 및 남한의 ‘北 해외파견 노동자들 인권문제 제기’ 반발(6.24, 중앙통신·중앙방송)
- ‘지금 남조선에서는 메르스에 의한 피해가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이것 역시 세월호 때와 마찬가지로 집권세력의 반역통치가 몰아온 문제’라고 비난(6.26, 평양방송)
- 우리 군의 연대급 합동상륙훈련 실시(6.25-7.5, 안면도 인근 해상), 연합뉴스 인용 보도 및 “지금 조선반도 정세는 6·25의 그날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비난(6.27, 중앙통신)
- 유엔 ‘北인권사무소’ 서울개소에 대한 대통령 및 외교부·통일부장관의 발언 관련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를 직접 겨냥한 특대형 도발’이라며 ‘반공화국 인권소동의 종착점은 전쟁이고 ‘비참한 자멸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주장(6.28, 중앙통신·노동신문)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북한 “미국 제2의 한국전 계획…높은 단계 반미투쟁 돌입”(6/25, 연합뉴스)
 - 북한은 25일 한국전쟁 65주년을 맞아 국방위원회의 성명을 통해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 힘으로 ‘석권’하기 위한 미국의 제2의 조선전쟁 계획은 이미 실전단계에 진입한 상태”라고 우려한 내용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보도함.
 - 성명은 “우리의 중핵적인 전략 대상물을 타격하기 위한 ‘외과수술식 타격계획’ 으로부터 공화국 북반부의 전 지역을 강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전계획에 이르는 미국의 전면전쟁 각본이 오래전에 꾸며졌다”고 주장함.
 - 국방위는 따라서 “미제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그에 따른 전대미문의 고립 압살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거족적인 반미투쟁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진입한다는 것을 온 세계에 공표한다”고 선언함.

나. 주요 매체 논평

- 북한, 미국 ‘맨해튼계획’ 핵시설 역사공원 지정 비난(6/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핵 범인의 과렴치한 역사공원 지정 놀음’이란 제목의 글에서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맨해튼계획’ 핵 관련 시설의 국립역사공원 지정에 대해 “미국 정부가 범죄적인 대학살 만행을 저지르는 데 이용한 원자탄 개발시설들을 큰 자랑거리나 되는 것처럼 국립역사공원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정의와 양심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고 우롱”이라고 비난함.
 - 신문은 “미국의 원자탄 개발 장소들은 과학의 급속한 진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전쟁도발과 인류 대학살, 패권실현에 악용해온 범죄현장”이라고 강조함.
- 북한 “일본 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는 후안무치”(6/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후안무치한 일본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책동’이라는 글에서 “극악한 범행들로 가득찬 일제의 죄 많은 과거사를 인류 공동의 재보인 세계문화유산과 나란히 한다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함.

- 이어 “이는 일제의 범죄적 만행을 미화하고 과거 침략전쟁 역사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인류 문명에 대한 모독이자 전쟁의 참화 속에서 고통을 강요당한 사람들에 대한 우롱”이라고 지적함.
- 북한, 6·25 맞아 ‘반미투쟁’ 선동…“핵 억제력 강화”(6/25, 조선중앙TV, 노동신문)
 - 조선중앙TV는 25일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6·25 미제 반대 투쟁의 날’ 군중대회를 녹화 중계함.
 - 25일 대회 주석단에는 박봉주 내각 총리,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양건·김평해 당 비서, 조연준 당 제1부부장과 로두철·김용진·리무영·리철만 내각 부총리,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 등이 배석함.
 - 노동신문은 25일 ‘선군의 기치 높이 평화를 수호하고 자주통일을 앞당기자’라는 제목의 사설과 5~6면에 실린 한국전쟁 관련 글, 전시가요 소개 등으로 반미 의식을 고취하고 핵 무력 강화를 재천명함.
 - 신문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다지고다져온 무진막강한 자위적 국방력은 결코 협상탁위에 올려놓을 정치적 흥정물이 아니다”라며 “제국주의 침략 세력의 핵전쟁 도발책동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핵억제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함.

다. 회담 관련

- 북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러 상·하원 의장과 회담(6/23,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2일 모스크바에 도착한 최태복 의장이 23일(현지시간) 러시아 연방회의(상원)에 도착해 영접 나온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의장과 만나 회담했으며, 마트비옌코 의장은 회담에서 남북러 협력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3각 협력 사업이 한반도 정세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뉴스는 이에 최 의장은 “최고 지도자 김정은 동지가 조-러 관계의 지속적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러시아의 대서방 강경 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힌 내용을 보도함.
 - 또 뉴스는 최 의장이 23일(현지시간) 상원 방문에 앞서 국가두마(하원)를 찾아

세르게이 나리슈킨 의장과 회담하고, 회담에 참석한 하원 제1부의장 이반 멜니코프는 회담에서 북한 핵문제도 언급됐지만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전한 내용을 보도함.

라. 대미국

- 미 “북한 인권상황 세계 최악”...영아살해 등 잔학 고문(6/26, 연합뉴스)
 - 미 국무부는 25일 발표한 ‘201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지난해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보고서를 폭넓게 반영해 이같이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26일 보도함.
 - 보고서는 “COI가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총체적인 인권 침해가 북한 정부와 기관, 관리들에 의해 지속되고 있으며, 나아가 그러한 침해가 많은 경우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고 인용함.
 - 특히 “북한 당국은 생존 조건이 잔혹하고 수용자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며, 살아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함.

- 북한, 미 인권보고서에 “대북 고립책동 산산조각 내겠다”(6/2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7일 미국 국무부가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인권 실태를 지적한 데 대해 ‘고립압살책동’이라고 반발하며 강도 높은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7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병진노선의 장엄한 포성 앞에 미국의 대조선 고립압살책동이 어떻게 산산조각나는가를 세계는 똑똑히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대변인은 “미국이 병적으로 굳어진 우리에게 대한 관점을 고칠 생각은 꼬물만큼도 없이 대조선 적대정책에 매달리고 있다”며 “이를 짓부시기 위한 우리의 대응 조치들 역시 실천적 단계에서 보다 강도 높게 취해질 것”이라고 강조함.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특이사항 없음.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아. 국제기구

- 방북 EU 대표단, 인권·한반도 정세 논의(6/25, 조선중앙방송)
 - 유럽연합(EU) 대표단이 19~24일 북한을 방문해 인권 문제와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5일 보도함.
 - 방송은 25일 EU 대외관계청(EEAS)의 게하르트 자바틸 동아시아·태평양 국장이 체류 기간 외무성 관계자들을 방문해 제14차 국장급 북한-EU 정치대화를 진행했다고 전함.
 - 방북기간 EU 대표단은 북한 노동당 국제부, 최고재판소(대법원)와 최고검찰소(대검찰청), 내각 대외경제성 관계자들과 조선·EU친선의원단 위원장과의 담화함.

자. 기타 국가

- 북한, 쿠웨이트 폭탄테러 인명피해에 위로 전문(6/2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쿠웨이트의 시아파 모스크(이슬람 사원) 폭탄 테러에 대해 쿠웨이트 국왕에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명의의 위로 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함.

- 김 상임위원장은 “온갖 형태의 테러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정부의 일관하고도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번 테러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힘.

- 러시아 연해변강위원회기관지 책임주필(바체슬라프 곤차로프)과 일행, 6월 22일 평양 도착 및 만수대연덕 김일성父子 동상 참배(6.22, 중앙통신·중앙방송)
- 몽골 외무성 외교단복무국 친선대표단(단장: 오프건바야르 자야만다흐 국장), 6월 22일 평양 도착 및 만수대연덕 김일성父子 동상 참배(6.22, 중앙통신·중앙방송)
- 국제가족계획연맹대표단(단장: 테워드로스 멜레세 총국장), 6월 22일 평양 도착(6.22, 중앙통신·중앙방송)
- 日 헌법 전문가의 ‘안전보장 관련법안’ 헌법위반 표명과 일본시민들의 안보법 개정 움직임 반대를 거론하며 ‘일본의 사회계가 나라의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며 ‘안보법 개정은 스스로 화를 청하는 정치적 자살행위’이라고 주장(6.23, 중앙통신·민주조선)
- 재일동포조국방문단(단장 : 조천기「총련」중앙상임위 부국장), 6월 23일 귀국(6.23 중앙통신·중앙방송)
- 러시아 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 백두산지구 답사단(단장 : 예브게니 라센코 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 연해변강총 1비서), 6월 24일 나선시 도착(6.24, 중앙통신·중앙방송)
- 프랑스 실업계 대표단(단장 : 알방 용 프랑스 ‘빅토르 세갈렌기금’ 중국 대표), 6월 24일 평양 도착(6.24, 중앙통신·중앙방송)
- 유럽대외활동성 대표단, 6월 24일 평양 출발(6.24,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노동당대표단(단장 : 강석주 당중앙위 비서)과 쿠바 공산당대표단, 6월 25일 쿠바 공산당 중앙위 청사에서 회담 진행(6.26, 중앙통신·중앙방송)
- 재러시아 동포 정일심, 6월 26일 평양 도착(6.26 중앙통신·중앙방송)
- 국제가족계획연맹대표단(단장 : 테워드로스 멜레세 총국장), 6월 26일 평양 출발(6.26 중앙통신·중앙방송)
- 미국은 ‘북침전쟁 계획에 따라 도발한 6·25전쟁의 진상을 숨기기 위해 유엔군 조작’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날조했다”고 왜곡 주장(6.27, 중앙통신·노동신문)
- 강석주(黨 비서, 쿠바 방문 北 노동당 대표단장), 6월 26일 쿠바 외무상(브루노 로드리게스)과 담화 및 北 노동당 대표단의 ‘쿠바 혁명박물관’ 등 참관 소식 보도(6.27, 중앙통신·중앙방송)
- 프랑스 실업계 대표단·몽골 외무성 외교단복무국 친선대표단, 6월 27일 각각 평양 출발(6.27, 중앙통신·중앙방송)

3. 대내정치

가. 김정은 동향

- 북한, 초음속전투기 모는 첫 여성 조종사 탄생(6/2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여성 초음속전투기 비행사’ 조급향과 림설의 훈련을 직접 참관하고 “건군사에 처음으로 여성 초음속전투비행사들이 태어났다”며 기뻐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당시 이들을 초음속전투기 비행사로 육성하라는 지시를 내림에 따라 이들이 곧바로 전환훈련을 시작해 오늘에 이르렀다고 소개함.
 - 22일 비행훈련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오금철 군 부총참모장, 리병철 당 제1부부장 등이 참석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북한, 순방외교 본격화…최태복 의장 러시아 방문길(6/2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일행이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함.
- 북한 리수용 외무상, 적도기니 방문(6/22,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22일 리수용 외무상을 단장으로 한 북한 정부대표단이 21일 적도기니의 수도 말라보에 도착 한 소식을 전하면서 적도기니 외무·협조성 대표상과 사절 담당 대사, 주 적도기니 북한 대사관 관계자들이 대표단을 맞이했다고 보도함.
- 북한 리수용 외무상, 적도기니 외교장관과 회담(6/24, 조선중앙통신)
 -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아가피토 르바 모쿠이 적도기니 외교협력장관과 회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함.
 - 통신은 리 외무상과 모쿠이 외교협력장관이 지난 22일 회담을 열고 “쌍무관계를 여러 분야에 걸쳐 적극 확대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전함.

- 회담에는 북측 대표단과 적도기니 주재 북한대사, 적도기니 수상부 외교담당참사, 외교협력부 총서기, 사절 담당 대사 등이 참석함.
- 북한 리수용 외무상, 적도기니 대통령 면담(6/25, 조선중앙통신)
 -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적도기니 대통령궁전에서 테오도로 오비앙 은게마 음바소고 대통령을 면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함.
 - 통신은 음바소고 대통령이 “지난 40여 년간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북한과의) 친선협조관계를 계속 확대 강화하려는 것은 적도기니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전함.
 - 회담에는 북한 대표단과 적도기니 주재 북한 대사, 적도기니 외교협력부 장관 등이 참석함.
- 북한 최태복 의장, 러시아 방문 마치고 귀국(6/26, 조선중앙통신)
 - 우리의 국회의장 격인 북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26일 귀국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마트비옌코 의장은 최 의장에게 “양국관계를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키려는 러시아 지도부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들에서 조선에 대한 지지를 변함없이 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중앙통신이 전함.
- 북한 리수용 외무상, 나미비아 대통령과 담화(6/28, 조선중앙방송)
 -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나미비아 대통령 궁전에서 하계 쟁고부 대통령을 만나 담화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8일 보도함.
 - 리 외무상은 또 나미비아의 수상과 수산·바다자원상, 광물·자원상도 만남.

다. 공식 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북한, 지방선거 앞두고 ‘평등·직접·비밀’ 선거제 선전(6/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나라마다 선거가 다 진행되지만 그 성격과 목적,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우리 선거제도처럼 혁명적이고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 선거제도는 찾아볼 수 없다”고 자랑함.
 - 리경철 사회과학원 실장은 “17살 이상의 모든 국민은 누구나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고 남녀별과 민족별, 직업과 거주기간, 재산 및 지식 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참가하는 것이 우리 선거제도”라고 설명함.
 - 리경철 실장은 “각급 주권기관 선거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기초한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진행되며 연로, 병 등으로 선거장에 나올 수 없는 선거자들도 이동투표함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고 강조함.

- 조선노동당대표단(단장: 강석주 黨중앙위 정치국 위원이며 비서), 6월 22일 쿠바 방문차 평양 출발(6.22,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최고검찰소 대표단(단장: 장병규 소장), 6월 22일 러시아 방문후 귀환(6.22,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용진(내각 부총리), 6월 24일 국제가족계획연맹 대표단과 담화(6.24, 중앙통신)
- 北 노동당 대표단(단장 : 강석주 黨 비서), 6월 23일 쿠바 도착(6.24, 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과학기술전당 건설을 적극 지원한” 일꾼-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6.27, 중앙방송·노동신문)
- ‘조선인민군대가 무적강군으로 이름을 높이 떨치고 있는 것은 최고사령관을 진두에 높이 모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북침전쟁도발책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는 원수들은 천만군민의 힘은 그 무엇으로써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6.28, 중앙통신·노동신문)

4. 경제

가. 정책 동향

- 북한, 산림복구 부진 또 공개질타…“패배주의 탓”(6/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7일 ‘양묘장은 산림복구 전투에 대한 입장과 관점을 보여준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평안북도 천마군, 황해북도 봉산군의 복구 실적 부진을 꾸짖음.
 - 신문은 천마군 산림경영소의 야외재배장이 5월 8일 현재 기준면적의 2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봉산군 산림경영소도 6월 5일 현재까지 가뭄피해를 막기 위한 우물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함.
 - 그러면서 “당정책 관철을 위해 간부들이 있고 당정책의 운명도 다름 아닌 간부들의 어깨 위에 놓여 있다”면서 각 지역의 ‘산림복구전투’지휘부는 현장에 직접 나가 실태를 살피고 즉시 대책을 세워 성과를 확대하라고 요구함.
 - 신문은 4면에 ‘과학기술로 산림복구 전투의 승리를 담보해 간다’는 특집 기사를 실어 강원도산림과학 연구소, 국가과학원 함흥분원 등의 성과 창출 사례를 자세히 소개하기도 함.

- 북한, 포전담당제 성과 실증…“왕가뭄에도 알곡증산”(6/28, 통일신보)
 - 지영수 북한 농업과학원 농업경영연구소 실장은 통일신보와 인터뷰에서 “지난 시기 분조에서 모내기 등에 20~30일 걸리던 것을 지금은 10~15일에 해제끼고, 50여일 걸리던 농사결속(마무리)을 열흘에 끝내고 있다”고 밝힘.
 - 지 실장은 “농장원들의 높아진 생산 열의는 제도를 실시하기 전에 비해 노력가동률이 95% 이상으로 올라간 것만 보고도 알 수 있다”며 “지난해 왕가뭄이 들이닥친 불리한 기후 조건에서도 알곡증산을 이룩했다”고 자랑함.
 - 그는 “제도 실시로 협동농장에서 사회주의 분배 원칙과 인연 없는 평균주의가 퇴치되고 분배몫과 국가수매량도 늘었다”며 “이러한 경험에 토대해 올해 전국 모든 협동농장에서 제도를 실정에 맞게 더욱 심화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함.

나.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 “북한 ‘100년만의 가뭄’에 전력난도 심각”(6/22, 워싱턴포스트)
 - 22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북한은 가뭄으로 심각한 전력 부족을 겪는 것으로 전해짐.
 - 한 평양 거주자는 WP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이 전력 생산에도 분명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고, 실제로 북한의 공장들이 전력난으로 가동을 멈추면서 산업 발전에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WP는 전함.

- 북한, 심한 가뭄으로 ‘소금기 있는 대동강물’까지 동원(6/2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노동신문의 지난 17일자에서 “올해 남포시 와우도구역의 농사가 최악의 조건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예전에는 저수지물을 이용했지만 올해는 가뭄으로 물이 부족해 “염도가 높은 대동강물로 모를 키워내고 관리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털어놓은 내용을 인용해 22일 보도함.
 - 신문은 농장 관계자들이 ‘단물(연수)에서 기른 모를 짠물에 적응시킨다면 일정한 기간 생육을 보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짜내고 이를 시험해보기로 했다고 전하고 이어 보름동안 소금기가 있는 물을 맹물에 섞어 모판에 댄 뒤 점차 염도를 높여 가면서 모를 키우기 시작했다고 설명함.

- “평양대사관 하루 3~4차례 정전”…외국 외교관의 평양 생활(6/25, 미국의소리)
 - 토마스 피슬러 스위스개발협력처(SDC) 평양사무소장은 2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평양의 외국대사관 공관도 하루 3~4차례 정전되고 있다”고 밝힘.
 - 피슬러 사무소장은 “지난 2013년 11월 평양에서 근무한 이래 지난 겨울처럼 전력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적은 없었다”며 “심할 경우 매 시간 전기가 나간 적도 있다”라고 말하고, 전력 상황이 악화된 이유에 대해서는 “가뭄으로 수력발전소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자주 접했다”고 설명함.
 - 호베르투 콜린 평양 주재 브라질 대사도 “지난 겨울 전력 상황이 심각했다”면서 “자주 정전이 됐고 전압도 매우 낮았다”고 돌아봄

- 북한, 평양 순안국제공항 신청사 완공...7월1일 준공식(6/2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5일 “혁명의 수도 평양의 관문인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가 선군시대의 기념비적 건축물로 웅장 화려하게 일떠섰다”고 보도함.
 - 통신은 이어 “김정은 동지께서 리설주 동지와 함께 훌륭히 완공된 평양 국제비행장 항공역사를 현지지도하셨다”고 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전용기를 타고 상공에서부터 공항건물을 구경한 뒤 현대적 미감과 민족적 특성, 주체성 등이 조화를 이루도록 잘 시공했다며 대만족감을 표시하며, “국제비행장으로부터 평양시 중심구역까지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를 새로 건설해 원활한 교통과 운수를 보장하라”고 지시하고 공사 관계자들에게 특별히 당 중앙의 이름으로 감사를 전하고 다음달 1일 준공식을 성대히 진행하라고 주문함.
 - 25일 현지지도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박봉주 내각 총리, 김양건 당비서, 리재일·리병철 당 제1부부장, 조용원 당 부부장이 수행했으며 현지에서는 강기섭 민용항공총국장과 림광웅이 이들을 맞이함.

라. 대외 경제 관계

- 북한 기업, 베트남 진출 활발...“외화벌이 나서”(6/23, 연합뉴스)
 - 23일 코트라 호치민 무역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4월 15~18일 조선평양무역, 금강산무역 등 6개 기업을 베트남 엑스포에 참가시켜 자국 상품을 홍보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북한은 앞서 지난 3월에는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홈페이지에 원산-금강산 개발 관련 외국인 투자 유치에 관한 글을 올려 원산 항구도시, 마식령 스키리조트, 단천해변 머드 체험 등 모두 6개 주요 관광지에 대한 투자를 유도했다고 뉴스는 보도함.
 - 이와 함께 북한은 현재 베트남에 모두 120만 달러(13억2천만원)를 투자해 호치민과 하노이에서 5개의 상점도 운영하고 있다고 뉴스는 보도함.
 - 또한 뉴스는 북한이 평양관, 류경식당 등 음식점 2곳과 홍삼, 영지, 녹용제품 판매점인 만년베트남은 홈페이지와 온라인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고 페이스북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도 개설하는 등 활발한 영업과 홍보를

하고 있다고 보도함.

- 스웨덴, 대북 식수·위생 사업에 3억8천만원 지원(6/24, 미국의소리)
 - 스웨덴 정부가 아일랜드 비정부기구의 대북 식수 지원 및 위생 사업에 35만 달러(약 3억8천700만원)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4일 전함.

- 中훈춘-北나선 산악자전거관광 첫 ‘페달’(6/25, 연합뉴스)
 - 25일 중국 훈춘시범구망에 따르면 중국 지린(吉林)성 훈춘(琿春)시와 북한 함경북도 나선시를 오가는 다국적 산악자전거 관광 코스가 개통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관광객들은 1박2일 동안 두만강변 80km 구간의 도로를 자전거로 달리며 정취를 즐긴 뒤 중국으로 돌아오게 되며 훈춘출입경검사검역국은 관광객 편의를 위해 세관 및 변경검사 부문과 협의해 ‘원스톱 통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뉴스는 보도함.

- “북한, 새 이동사 설립…오라스콤 지분 뺏기 위한 의도”(6/26,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자국내 유일한 휴대전화 업체인 이집트계 고려링크에 이어 제2의 국영 이동통신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보도함.
 - 미국 회계법인인 딜로이트의 카이로사무소는 26일 고려링크의 최대주주인 이집트계 통신사 오라스콤의 1분기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북한 당국이 최근 국영업체를 통신사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힘.
 - 보고서는 그러나 오라스콤이 새 이동통신사업자와 경쟁하는 대신 합병을 추진 중이라며 경영진이 이미 북한 당국과 합병에 관해 잠정 합의했다고 전함.

- “북한, 적도기니서 3조3천억 규모 정보통신사업 수주”(6/26,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6일 콩고민주공화국 일간지 ‘르 포탱시엘’을 인용해 적도기니에 주재하는 북한의 정보통신 대표부가 30억 달러(3조3천억여원) 규모의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고 보도함.
 - 북한 소식통들은 이번에 수주한 사업은 적도기니 대통령의 경호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7개 주요 도시에 폐쇄회로(CC)TV와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위성으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북한 10월께 첫 농아유치원 개원…독일단체 지원”(6/26, 미국의소리)
 - 독일에 본부를 둔 대북 구호단체 ‘투게더 함흥’의 로버트 그룬드 대표는 2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오는 10월께 북한 최초의 농아유치원이 개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 그룬드 대표는 “이 유치원은 평양 모란봉구역 개선유치원 5층에 세워질 것이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함.

- 北, 은률광산의 대형장거리 벨트콘베아 수송선 운영 성과(수백m 제방 건설 등) 선전(6.23, 중앙통신·중앙방송)
- 사리원담공장 등 가금업기지들에서 ‘신형 먹이가공설비 도입·부화공정 무균화실현’의 “과학 기술성과 도입” 선전(6.24, 중앙통신)
- 평원군에서 만풍동 저류지 공사(200여km 구간 582,500㎡ 제방성토) 완료 및 “100여 정보의 새 땅에 모내기” 선전(6.27, 중앙방송·노동신문)
- 5월27일수산사업소 원양선단 첫 출항식, 6월 27일 진행(6.28, 평양방송)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AP통신 “북한, 외국인 인스타그램 사용제한 조짐”(6/22, AP통신)
 - AP통신은 22일 북한에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인 ‘고려링크’로 인스타그램에 접속하면 “경고!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이트이므로 접속할 수 없다”라는 영어 문구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함.
 - 통신은 스마트폰이 아닌 랜으로 인스타그램에 유선 접속할 때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으며 경고문은 최소 닷새 동안 떴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인스타그램만 차단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페이스북, 트위터 등 다른 소셜 미디어는 북한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밝힘.
- “북한, 외국도서·저장매체 반입 단속 강화”(6/28, 스푸트니크방송)
 - 북한이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외국인의 도서 및 전자 저장매체 반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고 러시아 스푸트니크방송이 28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을 인용해 보도함.
 - 대사관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은 최근 보낸 통지문에서 “북한에 도착하는 외국인 일부는 인쇄물 및 비방 선전이 담긴 메모리 카드를 관광 지역에 남겨둔다”며 “이런 자료는 국가 존엄성과 사회 질서를 훼손하고 국익을 위협한다”고 지적함.
 - 북한 외무성은 이어 “국제공항을 포함한 모든 국경 검문소에서 외국 문학과 전자매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함.

마. 사회 동향

- 북한, 비 왔지만 기름 여전…“장마철 강수량도 적을 듯”(6/2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조선에서 11일부터 20일 사이에 황해남북도의 전반적 지역에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다”고 보도함.

- 통신은 기상수문국 중앙기상예보소 심명옥 부소장을 인용해 “지난 열흘 기간에 조선의 황해남북도 지역에서 비가 내렸지만 여전히 장기적인 가물(가뭄)이 완전히 해소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전함.
 - 이어 “지난해 봄부터 지속되고 있는 엘니뇨 현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 영향을 주는 북서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 올해에 장마가 늦어질 것”이라며 “특히 장마철 기간 강수량이 적을 것으로 예견된다”고 덧붙임.
- 북한 고려호텔, 화재 후에도 정상 영업(6/22, AP통신)
 - AP통신은 22일 평양발로 북한 평양의 고려호텔이 화재 후에도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도함.
- 북한 우리민족끼리 ‘먹통’ 3주만에 접속 재개(6/24, 연합뉴스)
 - 중국에 서버를 둔 ‘우리민족끼리’의 접속이 먹통이 된지 3주 만에 재개됐다고 24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그러나 김일성방송대학 웹사이트 우리민족강당, 대외용 웹사이트 류경·조선의 오늘 등 다른 주요 웹사이트는 여전히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고 뉴스는 보도함.
- 북한 “과학기술 발전시켜 경제강국 건설”(6/24,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금수강산)
 - 북한은 노동신문 2개 면에 걸쳐 전문 연구기관과 연구원, 연구활동 등을 소개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1세기의 기둥산업은 생물산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생물산업 분야를 이끌어갈 연구기관으로 평양생물기술 연구원 전반을 소개함.
 - 조선중앙통신도 24일 닭 사육관리의 과학화를 보도하면서, 신의주 닭공장이 각종 미생물 효소제와 희토류 원소를 이용해 달걀 생산을 수년 전보다 7배 이상 늘었다고 통신은 전함.
 - ‘금수강산’ 5월호에도 ‘과학기술은 경제강국 건설의 생명’이란 글에서 “과학기술은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통해 생산을 활성화하고 경제강국 건설을 다그치게 할 수 있는 추동력”이라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함.

- 북한, 메르스 유입 방지 안간힘…“전국가적 사업”(6/26, 연합뉴스)
 - 대북 소식통들은 26일 북한이 최근 중동 지역에 근무하는 공관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들에게 귀국을 자제하라는 방침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북한 방송도 보건 당국이 메르스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北, 지난 3년간 현대식 농촌마을들이 증가되었다고 선전(6.22, 중앙방송)

©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특이사항 없음.

나. 미·북 관계

- 미국 국방부 장관, “미국 핵 능력이 북한 도발 억제”(6/26, 연합뉴스)
 -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장관은 미국의 핵 능력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음.
 - 워크 장관은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맞서 미사일 방어망을 확장하고 북한의 핵 능력 증가 추세보다 한발 앞서 우월적 군사력을 유지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미국의 핵전력은 현재 세계 최고임에 틀림없다”면서도 “러시아와 중국이 핵 능력을 지속적으로 현대화하는 것에 미국이 대비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핵전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 중·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일·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러·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기타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 관련**가. 한·미 관계**

- 최윤희 합참의장, 미국 전략사령관 면담…북한 위협 논의(6/23, 연합뉴스)
 - 세실 헤이니 미군 전략사령관은 이날 최윤희 합참의장을 만나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합참은 이날 두 사람이 “핵·미사일 및 사이버 위협을 포함한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대해 평가하고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유사시 미국 전략자산 전개 등 양국의 효과적인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회동은 헤이니 사령관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양국 군 고위급 교류를 통한 한미동맹 강화가 목적이라고 합참은 덧붙였다.
 - 헤이니 사령관은 2013년 11월 취임한 이후로는 처음으로 지난 21일 한국을 방문했으며, 오는 24일 한국을 떠나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 미군 전략사령부는 미국의 핵무기 운용뿐 아니라 외부의 대량파괴무기(WMD), 사이버 공격 방어 임무도 맡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헤이니 사령관의 이번 방한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합참 관계자는 “사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로즈 미국 국무차관보, “한반도 사드배치 고려…상황 검토”(6/26, 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한반도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검증·이행담당 차관보가 다시 밝혔음.

- 지난달 19일 로즈 차관보는 한미연구소(ICAS) 주최 토론회에서 “비록 우리가 한반 도에 사드 포대의 영구 주둔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와 공식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사드 포대의 한반도 내 영구 주둔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한반도에 대한 잠재적인 사드 배치 결정을 고려하고 있지만,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음.
- 한국 정부와 이 문제를 협의했는지에 대해 그는 “사드의 영구 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의 협의는 없었다”며 “우리(미국 정부)는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미국, “한국군내 가혹행위·공무원-교사 정치관여 제한 문제”(6/26, 연합뉴스)

-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4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편에서 먼저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 평가하면서도, 그동안 제기해 온 국가보안법 논란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새롭게 포함했음.
- 총평에서 “한국의 주요한 인권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보법과 명예훼손법, 기타 다른 법률, 그리고 인터넷 접근 제한, 양심적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한 처벌, 군대 내 괴롭힘과 (신병) 신고식 등”이라고 했으며, 언론의 자유 부문에서는 일본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것을 거론함.
- 국무부는 또 일부 관료들의 부패, 포괄적 차별금지법 부재, 성폭력과 가정폭력, 미성년 성매매, 인신매매 등과 함께 탈북자와 소수 인종, 성적 소수자, 에이즈 감염자, 외국인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음.
- 이와 함께 원 전 국정원장의 유죄판결을 비롯해 사이버사 댓글 의혹,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우수성 사건’을 적시했으며, 현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도 보고서에 포함했음.

나. 한·중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다. 한·일 관계

- 한일 세계유산 절충 마후엔 ‘독일의 돌직구’ 있었다(6/22, 연합뉴스)
 -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산업혁명 시설에서 이뤄진 조선인 강제징용 사실을 반영하는 문제를 놓고 한일 양국 사이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국을 상대로 한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진 과정을 소개했음.
 - 아베 신조 총리는 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지난 3월 방일했을 때부터 일찌감치 한국을 견제했으며, 한국도 산업혁명 유산을 유대인 강제수용소, 히로시마 원폭 돔 등과 같은 ‘부(負)의 유산’으로 자리매김을 시켜야 한다고 독일 설득에 공을 들였음.
 - 아베 총리는 한국의 견제가 심상치 않자 관계 부처에 ‘철저한 대응’을 지시해 외무성 기우치 부대신은 독일 국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등록 찬성을 호소했지만 독일 장관은 “독일은 이웃나라와 화해해왔다. 일본도 노력해 달라”고 쓴소리를 했다는 것임.
 - 이런 상황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지난 12일 독일을 방문, 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한 것은 일본 측에 강한 압박이 된 것으로 보이며 또 복수의 위원회 위원국들로부터 ‘일본 입장은 지지하지만 이대로라면 기권할지 모른다’는 입장이 일본 외무성으로 날아들었음.
 - 결국 일본은 지난 19일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외무심의관을 서울에 급파,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강제징용을 반영하라는 한국의 요구와 관련해 일정한 대응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마이니치는 보도함.
- 한일관계 개선 움직임에 미중, ‘환영’(6/23, 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이 22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관계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미국은 조야 가릴 것 없이 환영 기류를 보이고 있음.
 - 미국 국무부는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양국의 좋은 관계는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 서로 이익이 될 뿐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환영했음.
 - 중국 정부 또한 루캉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우리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발전을 기쁘게 바라본다”며, “우리는 또 한일 관계 발전이 유관국가(일본)가 평화·발전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추동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박근혜 대통령, “새 미래 여는 원년”...아베 총리 “새 시대 만들자”(6/22,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서울과 도쿄에서 각각 열린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에 교차 참석해 “새로운 미래와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밝혔다.
 -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행사에서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이 대독한 아베 총리의 메시지를 청취했고, 마찬가지로 아베 총리는 도쿄 행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대독한 박 대통령의 축사를 경청했음.
 - 박 대통령은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가 두 나라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역사적 기회이고 한일 양국이 새로운 협력과 공영의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양국 국민들 간의 신뢰 구축 위해 양측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베 총리도 도쿄 행사 축사를 통해 한일 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서로 신뢰하고 관계를 발전시켜 가야 한다면서, 한일이 가지는 전략적 이익을 거론하며 한일 간의 협력과 더불어 한·미·일 3각 공조를 강조했다.

- 윤병세 외교부 장관, “위안부 문제, 피해자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6/22,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위안부 문제를 피해자나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음.
 - 일본을 방문 중인 윤 장관은 NHK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를 우리가 분명하게 해결한다면 그 자체로 더 이상은 이것이 재론될 이유가 없다”며, “중요한 것은 50분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명예를 회복하고 양국 정부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로 넘어가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성사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에 관해서는 “양국관계 발전방향에 대한 상당히 깊이 있는 논의를 했고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공통 인식 도출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했으며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한일 정상회담이 함께 실현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음.
 - NHK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면 재론되지 않을 것이라는 윤 장관의 발언이 한일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다면 한국 측이 이를 최종적인 결론으로 삼고 다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라고 풀이했음.

- 일본, 강제동원 사실 방문자용 자료·홈페이지 명시 검토(6/23,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합의에 따라 해당 시설에서 이뤄진 조선인 ‘강제 징용’에 관한 역사적 경위를 방문자를 상대로 한 설명 자료에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으며, 이와 관련해 “팸플릿 등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라고 말했다.
 - 또 산케이 신문은 시설의 현장 설명판,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 설명문에 한반도 출신자의 노동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 일본 정부는 관련 자료에 조선인 강제 동원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21일 열린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의 회담에 앞서 한국 측에 제시했으며, 구체적인 표현을 자료에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를 정리하는 세부 작업이 남았으나 한국 정부가 이 같은 구상을 수용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다만 조선인 강제노동을 어떤 식으로 기술할지를 놓고 논의에 진통이 있을 수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망했으며, 한국 정부는 ‘강제성’을 강조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반도 출신 피징용자를 ‘민간 징용자’로 칭하는데서 보듯 ‘강제노동’이라는 말에 익숙하지 않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 황교안 국무총리, “신뢰가능한 한일정상회담 여건 만드는게 중요”(6/23, 연합뉴스)
 - 황교안 국무총리는 23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서울과 도쿄에서 각각 열린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에 교차 참석한 데 대해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양국 현안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황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한일 관계 전망을 묻는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한 뒤 “이를 토대로 양국 관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돼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황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서는 “양국간의 신뢰 가능한 회담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누카가 일한연맹회장, “차대통령, 정상회담 가능토록 하고 싶다고 말해”(6/24,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열 수 있도록 해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박

대통령을 최근 접견한 ‘아베 특사’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회장(중의원 11선)이 밝혔음.

- 박 대통령은 또 같은 날 전해진 아베 총리의 메시지에 대해 “(아베) 총리도 양국관계를 개선해 조기에 회담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겠다”고 말했다고 누카가 회장은 부연했음.
- 박 대통령은 역사인식 문제에 관해 “과거 상처를 치유하며 신뢰할 수 있는 외교를 전개해 달라”고 말했다고 누카가는 소개했음.

■ 윤병세 외교부 장관, “위안부 恨풀수있어야”(6/25, 연합뉴스)

- 윤 장관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계기 자신의 첫 방일과 한일 외교장관회담,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기념행사 교차참석 등을 거론하며 “이번 주 전과 후,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 측면에서 차이가 느껴진다”고 밝혔음.
- 다만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역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가 가장 시급하다”면서 “앞으로 나올 조치들이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제사회 등의 기대에 부합해야 하고, 이는 일본 정부가 잘 알고 있다”고 말했음.
- 윤 장관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할머니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부분’이고 ‘한을 풀어드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며 “올해 국교정상화 50주년에 마무리를 지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한일 양쪽에 다 있다”고 밝혔음.
- 더불어 그는 ‘아베 담화’에 대해서는 “내용, 형식 모든 면에서 주변국과 국제사회가 기대해온 그런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거의 일치된 생각”이라며, “이번 기회에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역대 정부 역사인식 계승을) 얘기한다면 일본 자체의 이익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아주 긍정적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음.

■ 한·일 ‘정보공유’도 시작했다…한·미·일 안보협력 복원 수순(6/25, 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한국과 일본이 현행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하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공유를 시작했다고 확인함.
- 이는 비록 미국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지만, 군사 차원의 교류가 사실상 중단돼 있던 한국과 일본이 안보협력의 핵심부분인 정보공유를 시작함에 따라 양자관계 전반은 물론 동북아 정세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 한국과 일본은 2012년 양자 차원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추진하다가 국내 여론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으며, 한·미·일 3국이 지난해 12월29일에도 ‘북핵과 미사일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서명하바 있으나’ 한·일관계가 경색되면서 의미 있는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았음.
- 한·일 양국이 이처럼 정보공유를 이행하기 시작한 것은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을 통해 역내 안보적 패권질서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적극적 중용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 아베 총리, “韓식민지배 부정한 적 없지만 역사가에 맡겨야”(6/26,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중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식민 지배를 인정하고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 등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 한다고 밝혔지만,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반성이나 가치 판단은 거론하지 않은 채 “기본적으로 역사의 개개 문제는 역사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대표가 식민 지배를 당한 조선인의 고통을 상대 입장에서 생각 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아베 총리는 “상대국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아닐까 생각한다”면서도 “그 당시의 세계사적인 의미와 상황에 대해 방안을 생각해 가는 것도 중요하다”며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려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
- 또 그는 “전쟁 전 일·한 사이의 여러 일들에 대해서는 1965년 일한 기본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으며,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주장할 점은 확실히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고 말해 군위안부 문제 등 한일간 현안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미·중 관계

- 중국 해커들, 최고관리자 권한까지 갖고 미 인사처 해킹(6/22, 연합뉴스)
 - 중국 해커들이 미국 정보당국의 허술한 감시망을 틈타 ‘최고관리자권한’까지 얻어내 미 연방인사관리처(OPM)를 마음껏 해킹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음.
 - NYT는 미 정보기관이 5년 이상 방위산업체, 에너지기업, 전자회사 등을 겨냥한 중국 해커그룹들의 동향을 추적해 오다 지난해 해커들이 미 연방정부 컴퓨터 시스템으로 표적을 이동하면서 흔적을 놓쳤으며, 이들은 1년 가까이 정보당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난 덕분에 OPM 컴퓨터 네트워크의 운영자 인증을 위조해 최고관리자 권한을 확보, 연방공무원 수백만 명의 기밀 정보를 빼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 해킹 사건을 수사 중인 연방 조사관들은 해커들과 중국 정부 사이의 관계를 아직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다면서 다수의 해커 조직이 가담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일부 민간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서 단 하나의 해커 조직만이 탐지된다고 주장했다.

- 양제츠 국무위원, 미중전략대화 중요 의제로 북한 핵문제도 거론(6/23, 연합뉴스)
 - 중국의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미국과 중국 양자관계의 과제로 “전략적 소통을 심화하고 상호신뢰를 높이며, 오산을 피하고 차이점들과 민감한 문제들을 적절히 관리하고, 교류와 결과지향적인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 노력 필요성”을 제기했음.
 - 양 국무위원은 자신이 대표로 참석하는 미국과 중국간 제7차 전략경제대화(S&ED)를 앞두고 22일자 외교안보 전문매체 포린 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이 대화의 ‘당면 중요 의제’로 양국간 군사관계, 이란과 북한 핵문제 및 다른 지역적 분쟁소지(hotspot) 이슈들을 들며 이같이 말했음.
 - 그는 반테러 대책, 비확산, 사법공조, 기후변화, 에너지 및 환경, 과학기술 등도 이번 대화의 중요 의제라고 그는 밝혔으며, 미중간 당면 갈등 소재인 남중국해 문제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음.
 - 그는 ‘인류의 평화와 발전에 관해서’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번 대화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오는 9월 방미 준비를 위해 “가능한 한 생산적이 되도록” 대화

상대인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협력하길 기대했음.

- 중국 대변인, 미국에 “네 마음속에 내가, 내 마음속에 네가 있다”(6/23, 연합뉴스)
 -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시작된 중미 전략 경제 대화에서 남사군도 영유권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과 미국이 상호 협상을 통해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네 마음속에 내가 있고 내 마음속에 네가 있다”고 말했다.
 - 루 대변인은 중미 관계는 지난 30년 동안 발전을 통해 이 같은 관계를 형성했다면서 가끔 시각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익에 따라 입장이 달라 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양국 관계는 발전해왔으며 차이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 그는 쌍방이 고도의 공통된 인식을 통해 대화와 교류를 유지 확대하고 차이점을 통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남중국해 문제가 중미 간 문제가 아니며 중미 간 문제가 돼서도 안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왔다고면서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 미·중, “북한 병진노선 성공못해” 공감…한반도 비핵화 재확약(6/25,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제7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참석차 방미한 류옌둥 부총리를 비롯한 중국 대표단을 접견하고 “북한에 핵과 경제를 동시에 개발하려는 노력이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 미국과 중국이 최고위급 외교협의체에서 북한의 병진노선 문제점을 공식으로 심도 있게 논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이 전략경제대화과 같은 공식 외교석상에서 병진노선의 문제점을 논의했다는 것 자체는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며 “북한으로서는 매우 심기가 불편한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전망.
 - 오바마 대통령은 또 중국 대표단에 사이버 침해행위와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밟을 것과, 중국이 경제를 개혁하고 양자투자협정(BIT)을 계속하는 것을 지지하는 한편, 중국이 환율과 기술, 투자정책 분야의 주요한 경제적 도전과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음.
 -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 대표단은 6월말로 시한이 다가온 이란 핵협상과 기후변화

및 청정에너지 문제 협력에 대해 논의했으며, 상호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음.

- 미·중, 해킹갈등 방지 ‘사이버 행동강령’ 만든다(6/25, 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이 해킹 등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계속되는 충돌을 피하고자 사이버 행동 강령(code of conduct)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AP, AFP통신 등이 보도했음.
 - 존 케리 국무장관은 “사이버 침해가 안보 문제를 일으키고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면서 “양국은 사이버 공간 행위에 대한 인식 공유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백악관도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류옌둥 부총리, 왕양 부총리 등 중국측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중국의 사이버, 해상 행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긴장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음.
 - 23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전략경제대화에서 양국은 사이버 안보 문제 외에 해양 보존, 환율시장 개입 제한 등 해상·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음.

-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 “중국이 연방인사처 해킹 최고용의자”(6/26, 연합뉴스)
 -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5일(현지시간) 최근 발생한 미 연방인사관리처(OPM) 해킹 사건과 관련해 “중국이 최우선 용의자”라고 밝혔으며,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중국을 해킹 용의자로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클래퍼 국장은 “(연방정부 전산시스템에 대한) 침투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이 한 일에 대해 일종의 경의를 표해야 할 정도”라고 말했음.
 - 미 국토안보부는 OPM 전산망 해킹으로 연방공무원 400만명의 신상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으나, 캐서린 아출레타 OPM 처장은 최근 미 하원 정부감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피해 규모가 최대 1천800만명에 달할 수도 있다고 밝혔음.

- 미·중 “안보리 대북한 결의 실현에 공동노력”(6/26, 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및 북한 문제와 관련 2005년 합의된 ‘9·19 공동성명’의

전면적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제7차 전략경제대화(S&ED) 합의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음.

- 양국은 합의문에서 “즉 평화적 방식으로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더 나아가 9·19 공동성명의 전면적인 실현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실현(구체화)하는데 지속적으로 힘쓰기로 했다”고 밝혔음.
- 미중 양국은 올해 전략경제대화를 계기로 한반도 문제와 이란 핵문제, 대테러 문제를 비롯한 국제 및 지역문제와 기후변화, 양자관계 등 분야별로 대규모의 합의 성과를 이끌어냈으며, 이번 대화를 통해 전략 분야에서 100여개, 경제 분야에서 70여개, 인문 교류 분야에서 119개 항의 합의를 각각 이끌어냈음.
- 양국은 제7차 전략경제대화를 계기로 제5차 전략안보대화(SSD)와 제6차 미·중 고위 인적교류회담(CPE)도 함께 개최했으며, 중국 언론들은 양국간의 합의가 전략, 경제, 인문 등 ‘3개 트랙’을 합쳐 300여개 항목에 달한다면서 미·중 양국이 갈등보다는 실질적인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음.

■ 중국, 미국인권실태 조목조목 비판 “남 얘기하며 자기반성은 없어”(6/26, 연합뉴스)

-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2014년 미국의 인권기록’이란 연례보고서를 통해 “25일 발표된 미국의 인권 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에 이러쿵저러쿵 하면서도 자신의 형편없는 인권기록에 대해서는 그 어떤 반성이나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음.
- 중국이 발표한 보고서는 미국의 인권실태를 국민의 권리, 정치 권리, 경제·사회 권리, 인종차별, 여성·아동의 권리, 타국에 대한 인권 침해 등 6개 분야로 나눠 조목조목 비판했음.
- 중국은 미국에서 총기사용이 만연하고 폭력 범죄가 창궐해 국민의 권리가 엄중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흑인 청년을 백인 경찰관이 총살한 미주리주 퍼거슨 사태를 거론하며 경찰관의 과도한 폭력사용이 많은 사망자를 초래해 민중들의 강렬한 항의를 촉발시키고 있다고도 했음.
- 중국 정부는 또 미국에서 잔혹한 고문이 남용되고 중앙정보국의 고문을 비롯한 정보기관의 도·감청을 비판하고 소수민족의 구조적 차별과 사법절차에서의 종족적 편견이 존재한다고 꼬집었으며, 미국이 경제가 가장 발달한 국가이지만

국민, 특히 여성과 아동의 경제·사회 권리는 여전히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 미·일 관계

- 가와노 가쓰토시 통합막료장, “남중국해 미군 순찰 합류 검토할 수도”(6/26, 연합뉴스)
 - 가와노 가쓰토시 통합막료장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한 인터뷰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함으로써 일본에 “매우 심각한 잠재적 우려”를 야기했다며 남중국해에서 미군과 함께 일본군이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그는 또 “중국은 남중국해에 주둔하는 해군 병력을 급속히 늘리고 국방부문 지출도 여전히 확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면서 “하지만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 행위를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가와노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10월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 핵개발을 이유로 들어 해상막료장(해군 참모총장)에서 통합막료장으로 승진임명한 인물임.
 - WSJ는 역내 평화구축 명분으로 동맹국들이 더 많이 역할해주길 원하는 미국으로서는 일본의 남중국해 순찰 합류 가능성이 희소식일 수 있다고 전했다.

사. 미·러 관계

- 미국 국방장관, “러시아와의 냉전, 푸틴 이후에도 지속 가능성”(6/22, 연합뉴스)
 - AF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 3개국 순방에 나선 카터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이후에도 러시아와의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 하에 군사적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카터 장관은 러시아가 과거 회귀적인 공격적 행동을 중단하고 미래 지향적 방향으로 나아가길 희망하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면서 “러시아는 푸틴의 치하에서, 또 그 이후에도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그는 그림으로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러시아에 “강력하면서도 균형잡힌 접근”을 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동맹국은 러시아의 공격에 대응해 단단히 준비하는 동시에 때로는 협력도 하는, 두 가지 갈래의 접근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음.
- 미국 핵미사일 사령관, “푸틴 행동은 나치 독일과 유사”(6/23, 연합뉴스)
 - 미국의 핵미사일 대부분을 관할하고 있는 공군 국제타격사령부(AFGSC) 사령관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행동이 과거 나치 독일과 유사하다고 비판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보도했음.
 - 윌슨 사령관은 “그들은 한 지역을 병합, 국경을 변경하고 냉전시대 이후 접하지 못한 수사법을 제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의 전략적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러시아가 취한 행동의 일부는 나치에 의해 모든 국가들이 병합되고 국경이 변경됐던 1930년대 이후 접하지 못한 것들”이라고 비난했음.
 - 윌슨 사령관은 또 이 모임에서 러시아가 아무런 통보도 없이 서방 국가들의 영공 및 국제 항공로 인근에 군용기를 출격시킴으로써 항공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는 비행할 때 비행계획을 따르며 국제법에 따라 이를 통보하고 항공기의 트랜스폰더(송수신기)를 켜놓고 있지만 러시아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음.
- 미국, 러시아 위협 맞서 나토에 무기·병력 제공(6/23, 연합뉴스)
 - 미국이 러시아의 안보 위협 등에 대응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신속대응군에 무기와 항공기, 병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독일,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3개국 국방장관과 회담하고 난 뒤 이 계획을 공개했음.
 - 카터 장관은 “미국은 지난 수십년 간 그래 왔던 것처럼 유럽의 방어에 깊이 헌신하고자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카터 장관이 공개한 세부 계획에는 신속대응군에 정보·감시 역량과 특수부대 병력, 군수물자, 수송기와 폭격기, 함상 미사일 등 각종 무기를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지만 지상군을 제공한다는 내용은 제외됐음.
 - 이에 대해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신속대응군에 지원할 병력 규모, 차출 부대 등은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으면서 대다수는 이미 유럽에 주둔해 있는 미군

부대에서 파견될 가능성이 있으며 위기 상황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파견되는 것이라고 관리들은 설명했다.

- 러시아, “미 MD 수용한 폴란드·루마니아 공격 표적될 것”(6/24, 연합뉴스)
 - 러시아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받아들이기로 한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대해 자국의 공격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음.
 - 예브게니 루키야노프 러시아 안보회의 부서기는 “이 국가들이 미국 무기 시스템 때문에 러시아의 표적이 되는 것이 상관없다면 이는 그들의 선택”이라면서 “이 국가들은 아무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서방과 러시아 간 갈등 사이에 낀 신세이며 이같은 입지가 문제 될 게 없고 (미국) 동맹국으로서의 의무의 기본이라면 할 말은 없다”고 덧붙였다.
 - 루키야노프는 또 미국이 폴란드, 루마니아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과 발트3국 등에 250대의 장갑차 등 중화기를 배치하려는 계획에 대해 언급하며 이는 실질적 위협이 아니라 일부 나토 신규 회원국들의 건강하지 못한 (심리적) 흥분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비꼬았음.
 -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전날 에스토니아 탈린을 방문, 발트 3국 국방장관들과 회동하고 동유럽 국가와 발트3국에 중화기를 증강 배치하는 계획을 밝혔으며,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과 이슬람국가(IS)의 테러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음.

- 미국, 우주전 대응책으로 ‘우주전센터’ 설립 추진(6/25, 연합뉴스)
 - 미국의 온라인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원은 로버트 위크 국방부 차관의 말을 빌려 국방부와 정보공동체 공동으로 우주공간에 있는 자국 위성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공격을 격퇴하기 위한 다양한 전술 수립과 함께 ‘우주전센터’를 6개월 이내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보도했음.
 - 위크 차관은 전날 미국지리정보재단이 주최한 연례 심포지엄에 참가해 우주공간에서 미국이 차지해온 우위가 심각한 위협에 처해있다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 기술 등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그는 이어 우주작전센터의 개관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면서, 이 센터는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 내의 합동우주작전센터의 기능을 보강할 것이며, 군과 정부 기관의 공격 대비 태세를 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음.

- 워크 차관은 특히 러시아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 대상이 되고 있다면, 우주전센터가 이에 맞서 새로운 능력 개발 조정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신냉전’ 우려 속 오바마 대통령-푸틴 대통령 통화…우크라 사태 논의(6/26, 연합뉴스)
 -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서방과 러시아 간 ‘신냉전’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사태 해법을 논의했음.
 - AP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양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마감시한 을 앞둔 이란 핵협상,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대응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백악관은 밝혔음.
 - 백악관은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휴전 합의(민스크 합의)의 조건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며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영토로부터 모든 러시아군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키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음.
 - 양국 정상은 또 이란 핵협상과 관련해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서 주요 6개국(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독일)은 서로 단합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일치를 이뤘음.

아. 중·일 관계

- 중국 정부, “일본 지도자, 침략역사 반성해야” 거듭 촉구(6/24, 연합뉴스)
 - 루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후 70주년을 계기로 8월에 발표할 담화(일명 아베 담화)가 각의(국무회의) 결정 없이 총리 개인 담화로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대한 입장에 대해 침략의 역사를 깊이 반성할 것을 거듭 촉구했음.
 - 루 대변인은 이어 “실제 행동으로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이웃국가와 세계 인민의 신임을 얻을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그는 “올해는 중국 인민의 항일전쟁 및 세계 반(反) 파시즘 전쟁승리 70주년”이라면서 “일본 지도자가 역사 문제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에 대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 인민들과 일본 국내 민중들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일본-필리핀, 남중국해서 또 공동훈련…중국 견제 강화(6/24, 연합뉴스)
 - 일본과 필리핀의 군사 공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자위대와 필리핀군이 24일 남중국해 상공에서 합동훈련을 진행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음.
 - 훈련은 P3C의 정보수집 능력을 살려 조난선을 수색하고 필리핀 측의 항공기와 선박에 통보하는 내용이 중심이며, 일본과 필리핀은 지난 5월 12일 필리핀 해상에서 합동 훈련한 지 1개월여 만에 다시 합동 훈련을 진행했음.
 -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4일 정상회담을 열어 일본의 방위장비와 기술이전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하는 등 군사 공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 행보를 견제하는 포석으로 해석됨.

- 일본-필리핀, 대중 공동견제…中, “근육질 자랑말라”(6/26, 연합뉴스)
 - 중국에 맞서 군사공조를 강화하는 일본과 필리핀이 최근 남중국해에서 잇따라 합동훈련을 진행한 데 대해 중국군이 강력히 반발했음.
 - 양위권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서 최근 일본과 필리핀의 해상 합동훈련을 평가해 달라는 요청에 “어떤 국가(필리핀)가 외부국가를 남해(남중국해) 문제에 끌어들이 ‘근육질’ 자랑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의도적으로 지역 긴장 분위기를 과장하고 있다고 평가함.
 - 지난달 필리핀 해상에서 합동훈련을 한 일본과 필리핀은 지난 24일에도 P3C 초계기 등을 동원해 남중국해 상공에서 수색 및 구조 훈련을 했으며, 중국 언론들은 “훈련에 대잠 능력이 탁월한 P3C를 투입한 건 중국군이 운용하는 잠수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목적이 깔려있다”고 분석했음.

- 중국 외교부장, “일본은 진정으로 중국의 굴기 수용해야”(6/28, 연합뉴스)
 - 세계평화포럼에 참석한 왕이 외교부장은 일본이 중국의 가까운 이웃이며 중국은 양국의 평화로운 공존과 협력을 희망해왔고 이러한 대외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중일 관계는 근본적으로 일본이 중국의 새로운 발전과 굴기를 진심으로 수용하고 환영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 그는 또 역사문제에서 일본이 앞으로도 피고석에 계속 앉아 있을지 아니면 일본의 침략으로 피해를 본 국가들과 진정으로 화해하고 함께 미래를 열어나갈지 중대한 기로에 섰다면서 일본 지도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음.
- 그는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주권과 권익을 잠식하고 침해하는 일을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확고부동한 신념과 능력에 따라 정리와 법리에 맞게 중국의 정당한 권리를 계속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음.

자. 중·러 관계

- 러시아 야당, “중국인이 러시아 극동 지역 차지하게 해선 안돼”(6/22, 연합뉴스)
 -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극우민족주의 성향의 블라디미르 지리놉스키 당수가 이끄는 ‘자유민주당’은 극동 자바이칼주(州)의 대규모 농지를 중국 기업에 장기임대하는 계약 체결과 관련한 법적 절차를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의회 건의안 채택을 추진 중임.
 - 야로슬라프 니로프 자유민주당 부당수는 통신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 앞으로 보내는 건의안 초안이 이미 마련돼 조만간 하원 총회에서 심의될 것”이라며, “중국인에 토지를 임대하는 문제와 관련한 러시아의 국가안보 이익과 지정학적 결과 등에 대한 모든 위험 요소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음.
 - 이고리 레베데프 자유민주당 부대변인은 “토지 임대 계약서 조항에는 중국 기업이 농사를 짓는데 중국인들을 불러들이고 이를 위해 러시아 측이 비자와 국경 통과 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조만간 자바이칼주에 러시아인들보다 중국인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중국인들이 지역 정부에 포진하기 시작할 것이며 20~30년 뒤에는 자바이칼주가 중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음.

차. 일·러 관계

- 아베 총리-푸틴 대통령 전화 통화...‘푸틴 연내 방일’ 본격 추진(6/24,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푸틴 대통령과 약 30분간 전화통화를 하면서 푸틴 대통령의 연내 일본 방문 실현을 위해 양국간 대화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NHK가 보도했음.
 - 이와 함께 아베 총리는 자신의 ‘외교책사’격인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을 7월 초 러시아에 파견할 뜻을 굳혔으며 야치 국장은 니콜라이 파트루세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러시아 측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러일 양국간 대화 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NHK가 소개함.
 - 야치 국장의 방러에서 성과가 있으면 다음 단계로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을 추진한 뒤 러일 정상회담으로 연결한다는 것이 아베 총리의 복안임.

© 국제전략연구실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미 NGO, 의회에 대북 제재 촉구(6/22,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북한인권 비정부기구인 북한자유연합은 현재 온라인상에서 북한제재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운동을 진행 중임.
 - 이 기구가 최근 온라인 입법청원사이트까지 직접 구축해 시작한 이 운동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지난 2월 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대북제재이행법안이 하원 전체회의는 물론 상원에서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해당 지역구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압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 운동은 지난주부터 시작돼, 일주일 만에 현재 900여 명의 미국 시민들이 온라인 청원에 참가했다고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솔티 대표는 밝혔음.
 - 솔티 대표는 온라인 상으로 미국 시민들이 탄원에 참가할 때마다, 미국 의원들이 그들의 탄원 내용들을 받아볼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 그는 이어 오는 7월 KCC, 즉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한인교회연합’이 미국 연방 상원, 하원들을 직접 방문해 대북 제재 법안에 대해 로비를 하기로 예정돼 있다면서, 이 운동에도 많은 미국 시민의 동참을 격려했음.
 - KCC는 오는 7월 14일부터 이틀 동안 워싱턴에서 다양한 북한인권 행사를 개최함.
 - 올해 행사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는 미국 의원들에게 북한 제재 이행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호소하는 것이라고 KCC는 밝히고 있음.

- 북에서 늘어나는 ‘노예시장’(6/23,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양강도 혜산시 ‘양강일보사’ 옆에서 압록강 주변 도로까지 길게 이어진 ‘인력시장’에서 젊은 남성 ‘꽃제비’들이 험값에 거래되고 있어 이른바 현대판 ‘노예시장’으로 불리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하고 있음.
 - 21일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노예시장’에 가면 소규모 장사꾼으로 위장한 ‘중매쟁이’들이 줄을 지어 있다”며 “‘중매쟁이’들을 찾아가면 필요한 인력을 언제든지 돈을 주고 구할 수 있다”고 밝혔음.
 - ‘중매쟁이’들은 일일 ‘잡부(잡일)’로부터 몇 년이라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노예 머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면 주변에 숨겨두었던 인력을 한 명씩 데리고 나와 선을 보이며 거래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 ‘노예시장’이 발달하면서 북한에는 ‘신식지주’와 ‘현대머슴’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며 ‘머슴’은 부자들의 아이를 돌보거나 빨래를 해주고 농작물을 가꾸는 등 여러 가지 힘든 가사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 또 이들은 하루 북한 돈 몇 천원에서 3만원까지 받으며 시간제, 일당제, 혹은 몇 년씩 장기간에 걸쳐 고용되기도 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 장사거리 조차 없는 가난한 주민들은 부자들로부터 숙식을 제공받기 위해 일부러 ‘머슴살이’를 자처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 이와 관련 20일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가까운 친척집에서 ‘머슴’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월급이라도 받지만 ‘중매쟁이’의 거간으로 남의 집에서 일하는 ‘머슴’들은 직접 월급을 받지 못한다”고 전했다.
- ‘노예시장’을 통해 고용된 ‘머슴’들은 먼저 30%의 알선료를 중매쟁이들에게 떼인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 청진시의 경우 수남시장과 포항시장에 가면 전문 ‘꽃제비’들을 인력으로 파는 ‘노예장사꾼’ 조직이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 북한, 인권사무소 개소에 “초강경 대응할 것”(6/23, 연합뉴스)

- 북한이 23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서 개소한 것을 맹비난하며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했다.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남조선에 유엔인권사무소라는 ‘유령기구’를 조작해낸 것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감히 도전하는 특대형 정치적 도발행위이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긴장을 격화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 대변인은 “우리는 적대세력들의 무모한 반공화국 인권 모략책동을 단호한 초강경대응으로 끝까지 철저히 짓밟개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북한당국이 이날 오후 5시 북한인권사무소가 개소한 뒤 불과 세 시간 만에 위협적인 반응을 내놓은 것은 남한과 국제사회의 인권공세에 공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됨.

- 북한, '무기징역형' 우리 국민 2명 법정 진술장면 공개(6/24, 연합뉴스)
 - 북한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남한 국민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가 전날 북한 최고재판소 법정에서 최종 진술을 하는 동영상을 24일 대남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TV를 통해 공개했음.
 -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는 우리민족끼리TV가 중국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쿠(優酷)에 올린 2분 51초 분량의 영상에서 한 사람씩 단상 앞으로 나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사죄했음.
 - 김국기 씨는 “나는 지난 10여 년간 중대 국가 비밀을 국정원에 제공하고 국가정치 테러 범죄행위에 가담한 사람”이라며 북한 당국에 대한 ‘모략선전물’ 제작·유포, 위조지폐 반입, 당·군사 기밀 유출 등을 시인했음.

- 북한 “인권사무소로 남북관계 파국…말로 할 때 지났다”(6/25, 연합뉴스)
 - 북한은 25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개소로 인해 남북관계가 “더이상 수습할 수도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며 “말로 할 때는 지났다”고 무력대응을 암시하는 위협을 쏟아냈음.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의 거둬드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이 유엔 북인권사무소라는 화근을 남조선 땅에 끌어들이며 북남관계는 더이상 만회할 수도 수습할 수도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며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음.
 - 조평통은 북한인권사무소 설치에 대해 ‘극악한 특대형 정치적 도발행위’,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악랄한 도전’, ‘끝까지 대결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 등의 표현으로 써가며 맹렬히 비난했음.
 - 이어 “이제는 말로 할 때는 지나갔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이 시각부터 북남관계에서 초래되는 모든 파국적 후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 패당이 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음.
 - 조평통은 지난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을 맞아 발표한 정부 성명을 언급하며 “엄중한 위기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가려 했으나 박근혜 패당이 우리의 아량과 성의를 전면거부했다”고 주장했다.
 - 이어 “동족의 선의와 아량에 도전해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히스테리적인 대결광란만을 일삼는 자들과는 더이상 상대할 것이 못 되며

최후의 결판만이 남아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 조평통은 이날 성명에서 남한 정부를 ‘박근혜 패당’이라고 지칭하며 험담해 대남 비난의 수위를 높이는 모습을 보였다.
- 북한이 이달 중순 정부 성명 발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는 비난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 북한, 유엔 인권사무소 또 비난…“무자비한 징벌할 것”(6/27, 연합뉴스)

- 북한이 서울에 개소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와 관련해 남한 당국에 보복을 암시하며 비난 공세를 이어갔다.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무자비한 징벌이 차례질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존엄과 체체를 함부로 건드리며 불순한 야망을 드러내는 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고 무자비하게 징벌하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밝혔다.
- 논평은 인권사무소에 대해 “허위자료들을 거두어 쌓아놓는 더러운 오물장이며 치사하기 이를데 없는 모략의 소굴”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 이어 남측 당국의 ‘무분별한 망동’ 때문에 “이제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돌이킬 수도 수습할 수도 없는 최악의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다”면서 “몸서리치는 징벌의 시각을 기다리라”고 위협했다.
- 내부 인권문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북한은 지난 23일 인권사무소 개소 후 각종 담화나 성명, 매체의 논평 등을 총동원해 연일 비난과 위협을 퍼붓고 있다.

■ 北, 美 인권보고서에 반발…“우리식 사회주의 전복할 야망”(6/27, 머니투데이)

- 북한이 27일 미국 국무부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지적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 최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개소에 이은 국제사회의 인권 공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강경 대응 선언으로 맞서고 있다.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의 질의응답에서 “25일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담당 차관보는 2014년 나라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는 특별기자회견이라는 데서 우리의 이른바 인권문제를 악의에 차서 걸고 들며 그 무슨 변화에 대해 운운했다”고 지적했다.
- 대변인은 “이 자의 망언을 통해 인권옹호의 미명 하에 어떻게 하나 인민대중

-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할 야망을 기어코 실현해보려는 미국의 흉악한 기도가 다시금 백일하에 날날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음.
- 이어 “미국이 악습적으로, 병적으로 굳어진 우리에게 대한 관점과 구태의연한 태도를 고칠 생각은 꼬물만큼도 없이 대조선 적대정책에 계속 매달리고 있다”며 “이를 짓부시기 위한 우리의 대응조치들 역시 실천적 단계에서 보다 강도 높게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음.
 - 대변인은 “선군조선이 울리는 병진노선의 장엄한 포성 앞에 미국의 대조선고립압살책동이 어떻게 산산조각나는가를 세계는 똑똑히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음.
 - 그는 “우리에게 대한 체질적 거부감과 적대감에 사로잡힌 미국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참다운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향유하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이 바로 보일 리 없다”며 인권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음.
 - 또 “미국이 아무리 기다려봐야 저들의 부질없는 망상이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인권 공세에 따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음.
 - 앞서 미 국무부는 25일(현지시간) 발표한 ‘201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세계에서 최악의 수준’으로 평가했음.
 - 보고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60년 이상 ‘김씨 일가(Kim family)’가 이끌고 있는 권위주의 국가로 당국은 보안군을 통해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은 그들의 정부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북한 정부는 주민들의 발언 자유를 포함해 언론, 집회, 결사, 종교, 노동자 권리 등의 많은 측면에서 주민 삶을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지배하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2. 북한 인권

-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식 ‘성황’(6/23,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의 북한인권사무소가 23일 서울에서 문을 열었음.
 -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많은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개소식에는 한국 언론은 물론 해외

취재진까지 몰려 성황을 이뤘음.

- 한국 내 인권단체들은 사무소 개소식에 앞서 환영 행사를 열고, 사무소 개설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또 탈북자들로 구성된 국제PEN망명북한작가센터도 유엔 인권 현장사무소 개설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 보신각 앞에서 남북 문인들의 시낭송 모임을 진행했음.
- 이들은 유엔의 인권사무소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기록하는 업무를 해나갈 예정임.
- 앞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유엔의 현장 거점이 될 것으로 보임.
-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개설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음.
-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음.

■ 미 국무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개소 환영”(6/24,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23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서 문을 연 것과 관련, 환영의 입장을 밝혔음.
-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를 축하하며, 한국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 커비 대변인은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시작한 훌륭한 북한 인권실태 조사 및 서류 작업을 앞으로 북한인권사무소가 계속 이어가게 돼 기쁘다”면서 “이런 노력은 앞으로 북한의 인권유린 관련 인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또 “이번 북한인권사무소 개소는 COI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고 덧붙였다.
- COI는 1년간의 조사를 토대로 지난해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반(反)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결론짓고, 책임 추궁 등의 후속 조치를 위한 조직 설치를 제안했음.
-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는 COI 권고를 반영한 결의안을 채택해, 유엔 인권최고

대표사무소(OHCHR)에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기록할 ‘현장 기반 조직’을 설치하도록 요청했음.

- 국제사회,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큰 기대(6/24, 미국의소리)
 - 국제사회는 그 동안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에 지대한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음.
 - 자이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지난 3월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제28차 정기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과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유엔 회원국들의 결의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했음.
 - 그러면서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정보를 수집하고 문서화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했음.
 - 미 국무부는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사무소를 서울에 설치키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환영 입장을 거듭 확인했음.
 - 국무부는 이 사무소가 북한의 지속적인 인권 유린을 감시하고 관련 증거를 기록해 향후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시했음.
 - 일본도 지속적으로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음.
 - 제네바 주재 일본대표부의 카지 미사코 대사는 지난 15일 유엔 인권이사회 29차 정기이사회에서, 북한에서 계속 극도로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이 밖에 영국과 프랑스와 캐나다, 호주 등 많은 나라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개설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음.
 - 제네바 한국대표부의 최석영 대사는 지난 15일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한국이 이 사무소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음.
 - 앞으로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감시하고 북한인권 기록을 보존하는 한편, 유엔이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임.
 - 북한 주민들, 특히 북한 정권의 중간 간부들은 인권 침해에 대한 기록 작업이 진행 중이며, 법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임.
 - 북한은 그 동안 현장사무소의 한국 설치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무자비한 징벌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했음.

- 이와 관련해, 마루스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현장사무소가 보복이나 협박의 대상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현장사무소가 충분한 재원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 박 대통령, 오늘 유엔인권최고대표 접견…北인권 논의(6/25, 뉴스원)
-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방한 중인 자이드 리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접견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 자이드 대표는 지난 23일 종로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현장사무소 개소식 참석차 우리나라를 찾았음.
 -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유엔의 인권 관련 업무와 활동을 총괄하는 최고직책”이라며 “유엔 체제 내의 인권활동 증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예방조치 시행, 인권 교육, 자문활동, 기술협력 제공, 인권이사회 등 관련 기구 활동지원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진행되는 접견엔 자이드 대표를 비롯해 시네 폴슨 북한인권현장사무소장, 로리 문거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아시아·태평양 국장 등이 자리를 함께함.
- 북한인권단체, 유엔 서울사무소에 요덕수용소 수감자 명단 제출(6/26, 미국의소리)
-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 ICNK는 26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요덕수용소에 수감된 180명의 이름과 나이, 수감 이유 등이 상세히 담긴 보고서를 공개했음.
 - ‘요덕수용소의 내 동료 수감자들’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지난 2000년부터 3년 동안 요덕수용소에 수감됐다 탈북한 정광일 씨의 기억을 토대로 작성됐음.
 - 정 씨는 기자회견에서 요덕수용소가 있던 서림천 혁명화 구역이 철거된 사실을 지난해 10월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 이에 앞서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에 있는 수용소를 대폭 확장해 요덕수용소에 있던 인원들을 이곳으로 옮기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음.
 -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 ICNK는 북한 당국은 명단에 담긴 180 명을

포함해 4백여 명 수감자들의 행방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음.

- 보고서에는 북한의 체신상인 심철호가 고위 간부 도청을 담당한 보위부를 비판하다 체포돼 요덕수용소에 수감된 일도 담겼음.
- 또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북한에서 진행된 대규모 숙청 사건인 ‘심화조 사건’과 89년 독일 유학 중이던 북한 학생들을 체제전복 혐의로 수감한 사건 등 동료 수감자들이 연루됐던 사건도 공개됐음.
- ICNK는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서울에 문을 연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에 제출했음.
-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실태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임.
- ICNK에 따르면 북한에는 현재 4 개의 정치범 수용소에 8만 명에서 12만 명의 주민들이 수감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미 “북한 인권상황 세계 최악”...오바마 정부들어 가장 부정적(6/26, 연합뉴스)

- 미국은 25일 북한의 인권상황이 세계 최악이라고 평가했음.
-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지난해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보고서를 폭넓게 반영해 이같이 발표했음.
- 보고서는 “COI가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총체적인 인권 침해가 북한 정부와 기관, 관리들에 의해 지속되고 있으며, 나아가 그러한 침해가 많은 경우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고 인용했음.
- 이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미 국무부의 가장 부정적 평가로 풀이됨.
- 국무부의 2009년 이후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평가는 ‘열악하다’(poor)를 시작으로 ‘개탄스럽다’(deplorable), ‘암울하다’(grim) 등이었으며 지난해 역시 ‘개탄스럽다’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음.
- 그러나 올해는 ‘세계 최악’(the worst in the world)이라는 매우 강력한 표현이 사용됐음.
- 이는 COI의 보고서가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옴.
- 국무부 보고서 역시 “북한의 인권 기록은 올해 매우 주의깊은 조사를 받았다”고 밝혀 COI의 최종 보고 내용이 평가에 반영됐음을 강하게 시사했음.

-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2013년 3월 함경북도 청진의 송평이라는 지역에서 남녀 각 1명을 필로폰의 주성분인 메타암페타민을 제조, 판매했다는 혐의로 공개 처형했으며 아동을 포함한 주민들이 이들 남녀가 폭행당하고 기둥에 묶여 총살되는 것을 강제로 봐야 했다는 COI 보고도 실었음.
 - 이어 보고서는 “탈북자들은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형을 비롯해 실종, 임의적 감금, 정치범 체포, 고문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며 “송환된 탈북자와 그 가족들은 중형에 처해진다는 보도가 있다”고 지적했음.
 - 특히 “북한 당국은 생존 조건이 잔혹하고 수용자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며, 살아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음.
 - 또 북·중 국경을 건넌 여성 탈북자와 노동자들은 인신매매에 노출돼있다고 덧붙였다.
 - 보고서는 “북한 주민은 그러한 정부를 바꿀 능력이 없으며, 북한 당국은 언론과 집회, 결사, 종교, 이동, 노동의 자유를 부정하는 등 주민들의 삶을 다양한 측면에서 엄혹하게 통치하고 있다”며 “재판부는 독립적이지도 않으며,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음.
- “유럽의회에서 내달 2일 북한인권 청문회 열려”(6/27, 연합뉴스)
- 유럽의회에서 다음 달 2일 ‘북한인권: 한반도의 목소리’를 주제로 한 북한인권 청문회가 열린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전했다.
 - 청문회는 라즐로 퇴게스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부위원장과 벨기에에 기반을 둔 정책연구소인 아시아학유럽연구소(EIAS)가 공동으로 개최함.
 -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 요덕수용소 내 서립천 혁명화구역 출신의 정광일씨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증언함.
 - 북한 정치범 수용소 피해자 가족협회 대표인 정씨는 26일 서울에 있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에 요덕수용소 수감자 180명의 명단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음.

3. 탈북자

- 탈북대학생 조셉 김 씨 LA서 강연회(6/22,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에서 굶주림에 힘들어 하고 있는 주민들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꼭 살아남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호텔에서 열린 특별 강연을 통해 탈북자 조셉 김 씨가 한 말임.
 - 김 씨는 하루 빨리 통일이 돼 더 이상 탈북의 힘들었던 과정, 그리고 북한의 어려운 생활을 증언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 김 씨는 1990년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나 12살 때 고아가 됐음.
 - 아버지가 굶주림에 사망하고, 어머니와 누나가 먹을 것을 구해오겠다고 탈북한 뒤 고아가 된 김 씨는 그해부터 꽃제비 생활을 하며 하루하루 먹을 것을 찾아 헤매며 연명했음.
 - 더 나은 삶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지난 2006년 중국으로 탈출한 김 씨는 중국에서 한 활동가를 만나 미국으로 오게 됐음.
 - 17살이던 2007년 미국에 정착한 그가 잃어버린 어머니와 누나를 위해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공부임.
 -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이 살아남는 것이라고 생각한 김 씨는 북한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먹을 것을 찾아 헤매었지만 미국에서 악착같이 공부해 지금 정치학을 공부하는 대학생이 됐음.
 - 그런 김 씨는 최근 ‘같은 하늘아래(Under the Same Sky)’라는 책을 출간했음.

4. 이산가족

- 특이사항 없음.

5. 납북자

- 유엔, 전후납북자 문제 본격 다룬다(6/22, TV조선)
 -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이 자행한 전후 납북 범죄를 본격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유엔이 그동안 포괄적으로 다뤄온 북한 인권 침해 문제 가운데 전후 납북자 문제에 보다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특히 마르주키 다르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관심을 갖고 이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짐.
 - 유엔은 지난해 11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에 기초해 북한 최고책임자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를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음.
 - 식량과 수용소 문제를 비롯해 고문, 구금, 차별, 납치 등 9가지 인권 침해 사례가 적시됐는데, 특히 타국민 납치 문제를 본격 논의하겠다는 것임.
 - 오는 9월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선 납치와 강제실종에 대한 패널 토론이 개최될 예정임.
 - 납북자 문제는 김정은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 중 하나로, 다국적 피해자 수백 명이 지금도 사실상 ‘강제 억류’ 상태임.
 - 여중생 시절 납북돼 생사불명인 요코타 메구미 씨 등 일본인 피해 사례도 상당함.
 - 납북자 문제에 대한 유엔의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에 상당한 압박이 가해질 전망이다.

6. 국군포로

- 특이사항 없음.

7. 대북지원

- 스웨덴, 대북 식수·위생 사업에 35만 달러 지원(6/24,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OCHA는 23일 공개한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보고서’에서 스웨덴 정부가 인도주의 구호단체인 ‘컨선 월드와이드’의 대북

- 사업에 미화 35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지원을 결정했으며, 지원금은 컨선 월드와이드가 북한에서 진행 중인 식수, 위생 사업에 쓰일 예정임.
 - 스웨덴 정부는 2013년과 2014년에도 이 단체의 대북 사업에 450만 크로나, 미화 68만 달러를 각각 지원했었음.
 - 컨선 월드와이드는 그동안 황해북도 금천군과 신계군에 양수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원해 왔음.
 - 또 신계군에 오물 처리 시설과 화장실을 건설해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한편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은 올해 대북 구호 사업에 2천650만 크로나, 미화 321만 달러를 책정했음.
 - 올해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의 지원을 받는 단체는 국제적십자사 IFRC와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유엔아동기금, 세이브 더 칠드런, 프리미어 어전스, 컨선 월드와이드 등임.

8. 북한동향

- 【외무성 대변인 담화(6.23)】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개소 관련 ‘북남관계 개선을 바라는 조선민족의 의사를 거역하고 북남대결을 극단으로 끌고 가는 엄중한 도발’이라며 ‘적대 세력들의 인권 모략책동을 초강경으로 끝까지 짓뭇개 버릴 것’이라고 위협(6.23,중앙통신)
- 北「조평통」 성명(6.24),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개소(6.23)로 “북남관계는 더 이상 만회할 수도, 수습할 수도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다”며 “이제는 말로 할 때는 지났다”고 위협(6.25,중앙통신·중앙방송)
 - 괴뢰패당이 감행한 반공화국 인권모략기구 설치소동을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로 낙인하면서 온 민족의 이름으로 단죄 규탄하며,
 - 이런 자들이 대화와 관계개선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언어도단으로 이 시각부터 북남관계에서 초래되는 모든 파국적 후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박궈 패당이 지게 될 것임.

- 「北」 조국통일연구원, 6월 24일 '남한의 노동실태(청년실업, 열악한 근로조건·환경, 여성근로자 차별대우 등) 비난 '백서' 발표 및 남한의 '北 해외파견 노동자들 인권문제 제기' 반발 (6.24,중앙통신·중앙방송)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유엔 北인권사무소 서울 개소 관련 '공화국의 존엄을 모독하고 체제를 부정하는 엄중한 적대행위로서 적대세력들은 반공화국 인권모략기구를 설치한 대가를 특특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연일 비난 및 위협(6.25,중앙통신/반공화국 인권모략의 소굴)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